

종합심사제 시행 초기 공사 낙찰률 오락가락

최저 76%-최고 83% 편차 커
종합제 집행물량 적어 발생
업계 “투찰 전략 마련 고심”

건설업계에 따르면 종합심사제 시행 이후 낙찰이 결정된 공사는 총 4건으로 평균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79.614%로 나타났다.

최저 낙찰률은 76.89%, 최고 낙찰률은 83.097%였다.

가장 최근 낙찰자 결정이 이뤄진 춘천시청사 건립공사의 낙찰률은 80.504%로 나오면서 편차가 큰 상황이다.

현재 심사 중인 공사의 경우 최저 74%에서 최대 85%까지 낙찰률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합제 집행물량이 적고 공사별로 조건이 달라 낙찰률 편차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종합제가 자리를 잡으면 평균 78% 선에서 낙찰률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최저가 낙찰제보다 3~4% 높고 시범사업에 비해서는 4~5% 낮은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낙찰률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돼 현재로서는 공사별로 투찰 전략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낙찰률 80%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종합제 도입 취지에 맞게 인위적인 낙찰률 형성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양양공항 26억원 공사 전국 발주 논란

지역업계 반발 입찰 재공고 요구

건설업계가 지역 내 공사의 도내 업체 참여 배려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는 최근 ‘양양공항 활주로 재포장 및 제방빙장 설치공사’의 입찰공고를 발표했다.

이 공사의 추정가격은 26억2,342만원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역제한 발주가 가능하지만 공사 양양지사는 전국으로 발주했다.

공사 양양지사는 지역 업체와 49% 이상 공동도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하지만 도내 건설업

계는 지역업체가 대표사로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찰공고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건설협회 도회도 공사 입찰서 제출이 시작되는 23일 전에 지역제한 발주로 변경되도록 공사 양양지사에 입찰 재공고를 요구하고 있다.

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도내 중소건설업체는 외지 및 대형업체의 진출로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입찰참가 자격을 국가 계약법에 명시한 지역제한 입찰 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6.co.kr

“양양공항 사업 지역업체 찬반”

공항공사, 26억 규모 공사 전국에 입찰 공고
도내 건설업체 반발… 공항 “참여 기회 제공”

한국공항공사가 양양공항 관련사업 발주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는 최근 26억 2400만원 규모의 양양공항 활주로 재포장 및 제방빙장설치공사를 입찰 공고했다. 공항공사는 이번 공고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전국으로 풀고 영업소 소재지가 강원도가 아닌 업체는 의무적으로 지역업체와 40% 이상 공동도급해야 한다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단서조

항으로 달았다. 이처럼 전국으로 입찰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공항 활주로의 포장은 일반 포장과 달리 항공기를 운항하며 야간에 이뤄져야 하는 등 공항 안전과 관련된 특수한공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항공사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설협회를 비롯한 도내 건설업체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82억원 미만은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할 수 있

음에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지역업체를 위한 처사라며 시설공사의 지역제한 적용 변경공고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다. 또 공항공사에서 내재우고 있는 난이도 등 기술적인 부분의 경우 활주로 재포장 공사는 기존 활주로를 깎아내고 다시 포장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도내 업체도 시공할 수 있는 공사라는 반응이다. 더욱이 전라도나 경상도 등 원거리의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경우 지형이 낯설어 오히려 어려움이 예상되고 하도급으로 떠넘길 경우 부실공사까지 우려된다며 변경공고를 촉구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동도급을 한다고 해도 결국 자금의 절반 이상은 외지로 역외유출 되는 것이 아니냐”며 “강원도와 양양군, 지역사회가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항공사측이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것은 이윤배반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실적제한을 하면 강원도 업체는 들어올 수조차 없다”며 “최소한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에도 공고의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발주처의 권한까지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총리 원주 방문

오늘 규제개혁 현장회의 참석

황교안(사진)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2시 원주기업도시 내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참석, 도내 각 현장의 규제애로를 청취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허가·신고제 합리화 방안과 공무원 행태 개선안 마련 후속 조치, 구조조정 업종 손톱 밑 가시 개선활동, 기업기술 규제 애로 해소 등의 안건을 토론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4대 과제도 중점 점검한다. 국무총리실 주재로 전국을 순회 중인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가 도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주/윤수용



아파트 쏟아진다

올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강원도에 2만2천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쏟아진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지난달까지 분양된 강원도 내 아파트의 입주 예정시기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도내 입주물량이 올 하반기 4579가구, 내년 5671가구, 2018년 1만134만 가구 등 총 2만3847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 1만134가구는 2010년

입주한 원주혁신도시 푸른솔10단지(935가구)를 비롯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흥업A1 영구임대(196가구), 흥업A1 국민임대(794가구), 봉화산벨라시티(566가구), 혁신도시A-2블록 공공임대(756가구) 등 3247가구가 공급된다. 내년에도 원주혁신중흥S-클래스프라자(850가구) 등 2988가구가 입주 예정이며 2018년에는 롯데캐슬더퍼스트1차(1243가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확대 ‘찬반’

정부의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기간 확대 방침에 입주민과 건설업계간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청구기간을 ‘집합건물법’과 일치시킨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공평별로 현행 1-3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건설사들이 짧은 책임기간이 지난 후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확대에 건설업

정부 2~5년 늘리는 제정안 입법예고
건설단체 반대 탄원서 국토부에 제출
공동주택 입주민 책임기간 확대 환영

계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단체는 공동명의로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기간 확대 반대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건설단체들은 “합리적 이유없는 과

도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연장은 건설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경영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정부인대로 시행될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기간이 증가하고 보증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결국 신규 아파트 원가 상승이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도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하

자담보책임기간 확대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하자보수 문제로 소송을 검토 중인 춘천 A 아파트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도배, 균열, 방수, 들뜸 등의 하자보수에 대해 미온적”이라며 “하자보수 기간은 현행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건설하자는 책임소재가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공방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며 “공급자와 입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수관련 위원회를 구성,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은복

도내 2018년까지 2만2천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쏟아진다. 원주 연내 3247가구…공급 과잉 우려

후 가장 많은 양으로 2011년 2313가구에 비해 4배가 넘는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0년 4505가구, 2012년 4238가구, 2014년 9004가구, 2015년 6075가구로 2014년을 제외하면 5000가구 내외로 아파트가 공급됐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3143가구가 입주된 데 이어 하반기 4579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등 올해 입주 아파트가 크게 늘어난 데다 2018년에는 1만134가구가 넘는 대규모 몰량 폭탄이 쏟아진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정지역에 아파트 공급량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 주택시장이 공급과잉으로 인한 ‘소화불량’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원주의 경우 올해 상반기

구), 롯데캐슬더퍼스트 2차(1116가구) 등 1년간 5152가구가 공급된다. 강릉과 속초, 춘천도 올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각각 3324가구, 2059가구, 1636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면서 도내 주요도시마다 미분양 사태 등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도내 주택보급율은 112.14%를 기록했으며 춘천 105.2%, 원주 121.5%, 강릉 104.4% 등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선 것도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원인 중 하나다. 도내 부동산 관계자는 “10년전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후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급과잉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섭 kees26@kado.net

【 2016.06.22(수) 건설경제 】

오인철 건협 강원도회장, 6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참석



오인철 대한건설 협회 강원도 회장(사진)이 22일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에 참석한다. 오 회장은 이 자리에서 건설현장 공사 정보를 기재한 건설공사대장 신고 항목을 축소해 달라는 등의 규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중부권 7개 시도 정책협의회 창립회의

‘SOC 확충·상생발전’ 손 맞잡았다

동서내륙철도 조기 건설 호남선 고속화 등 협력 강화

충청과 강원, 영호남을 아우르는 중부권 7개 광역자치단체가 상생발전과 정책공조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충청권 시도 등 중부권 7개 시도지사는 21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부권 정책협의회’ 창립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중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초대 협의회장에 선출된 권선택 대전시장은 인사말에서 “충청권과 강원, 전북, 경북은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을 함께해 온 역사적·정서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면서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일곱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7개 시도 간 공동변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협의회는 남북축 시대에서 동서축 시대를 의미한다”며 “동서 5축 중심의 국가도모를 3년 전에 제안했는데, 그것이 확대돼 새로운 동서축의 관점으로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7개 시도지사는 이날 합의문에서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국토의 허리기능 강화 등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공동 노력하



21일 오후 대전 서구 시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부권 정책협의회 창립회의’에서 중부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시중 충북도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 ▶

기로 했다.

공동 노력하기로 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조기 건설 △동서 3축, 5축, 6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호남선 고속화 사업 추진 △서대전역 경유 KTX 여수-목포 연결 및 증편 △세종~서울 고속도로(세종~안성) 조기 착공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반영 △수서발 KTX 및 기존 KTX 노선의 오송역 증편 등이다.

또 △남북 7축(간성~삼척~포항) 고속도로 조기 건설 △중부고속도로(남이~호남) 확장 조기 건설 △수서발 KTX 공주역 증편 △장항선 복선전철 조기 건설 △전주~김천 복선전철 조기 건설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 시 전라선 증편 △중부내륙철도

사업 반영 등도 포함됐다.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중부권 관광벨트 구축, 신라-중원 백제문화권 교류 등 중부권 7개 지역 상생발전과 공동 변영을 위한 숙원·핵심사업도 함께하기로 했다.

권 시장은 “이번 첫 회의는 협의회 규약 결정과 공동합의문 채택 등을 위한 자리이지만, 앞으로 지역발전 방안 모색, 지역 연계사업 발굴 등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자주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호남선(대전 가수원~논산 구간) 고속화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충청과 호남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강원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첫 삽

2020년까지 1조6224억 투입
외곽·접안·친수시설 등 조성

강원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이 첫 삽을 뜬다.

동해시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3일 오후 오전 11시 30분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기공식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은 2020년까지 1조6224억원을 들여 동해항 외곽과 접안시설, 입항 교통시설, 친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자유치를 통해 5만t급과 7만t급, 10만t급 규모의 부두 7개를 확충한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 방파제 1.85km, 방파

호안 2.3km 등 기반시설을 갖춘다.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이 끝나면 현재 2200만t인 하역능력이 4100만t으로 2배 정도 증가한다.

접안능력도 16척에서 23척으로 크게 개선돼 환동해권 물류산업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011년 제3차 항만 기본계획 확정·고시에 따라 그동안 동해항 3단계 추가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북방파제 등 외곽시설 기본·실시 설계 용역을 해왔다.

특히 공사 추진 시 증산 등 인근 지역 해안침식과 각종 환경문제 대책 마련을 놓고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삼척 주민대표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해결방안에 합의해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동해시 관계자는 “3단계 개발사업을 통해 동해항의 만능적인 체신율을 해소하고 해운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으로 원자재 물동량 증가에 선제로 대비하는 등 환동해권 물류산업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